



삼일회계법인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 담긴 ESG 과제

Sustainability Platform | September 2025



Table of contents

01	Intro	3
02	ESG 금융 및 공시 인프라 강화	5
03	분야별 과제현황 - E(환경)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 산업의 저탄소화 및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탈플라스틱 추진 및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및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와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04	분야별 과제현황 - S(사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장 개혁과 불평등 완화• 산업안전보건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경제 확립• 소비자 보호 강화	
05	분야별 과제현황 - G(거버넌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거버넌스 개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조성• 사익편취 금지	
06	기업 대응 방향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모니터링과 벤치마킹• 공시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 전략 재편• ESG 대응 체계의 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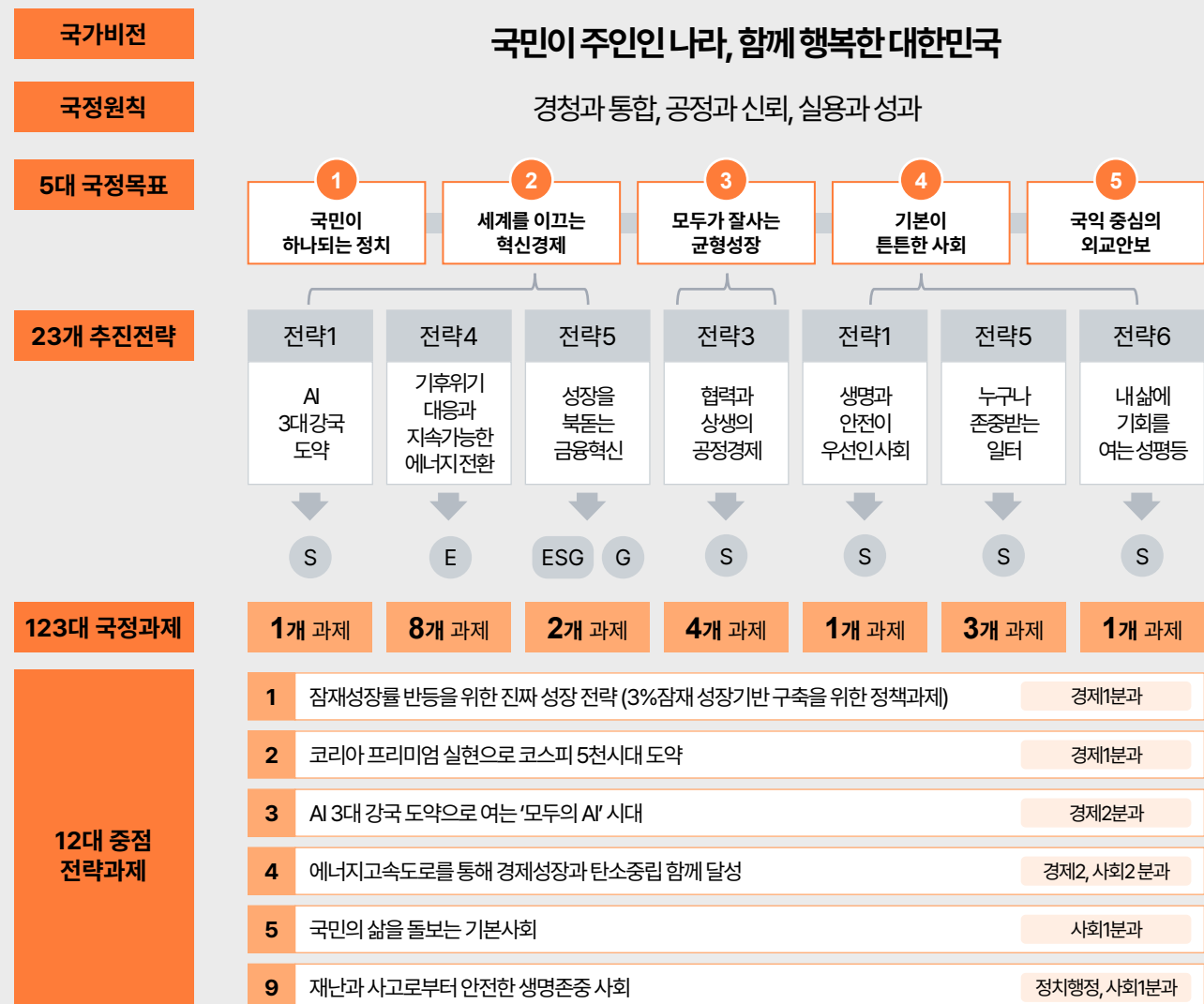
I . Intro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이 국정목표는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었으며, 전체 과제 중 약 20개(약 16.3%)는 ESG 관점에서 연계된 과제로 확인된다. 특히, 핵심 정책으로 분류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6개에 ESG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확인되는 공통된 흐름은 ESG가 국가 정책의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ESG가 국가차원의 성장 전략과 산업 구조 개편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속 ESG: 123개 국정 과제 중 20개 과제 ESG 연계

지난 16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약 20개 과제(약 16.3%)는 ESG 관점에서 연계된 과제로 확인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6개 과제에 ESG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I . Intro

ESG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div>전략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div> <table><tr><td>과제번호</td><td>과제명</td></tr><tr><td>46</td><td>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td></tr></table>	과제번호	과제명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과제번호	과제명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Environment 환경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div>전략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div> <table><tr><td>과제번호</td><td>과제명</td></tr><tr><td>38</td><td>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td></tr><tr><td>39</td><td>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td></tr><tr><td>40</td><td>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td></tr><tr><td>41</td><td>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td></tr><tr><td>42</td><td>순환경제 생태계 조성</td></tr><tr><td>43</td><td>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td></tr><tr><td>44</td><td>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td></tr><tr><td>45</td><td>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td></tr></table>	과제번호	과제명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과제번호	과제명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Social 사회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div>전략1 AI 3대 강국 도약</div> <table><tr><td>과제번호</td><td>과제명</td></tr><tr><td>25</td><td>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td></tr></table>	과제번호	과제명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과제번호	과제명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div>전략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div> <table><tr><td>과제번호</td><td>과제명</td></tr><tr><td>65</td><td>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td></tr><tr><td>66</td><td>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td></tr><tr><td>67</td><td>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td></tr></table>	과제번호	과제명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과제번호	과제명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div>전략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div> <table><tr><td>과제번호</td><td>과제명</td></tr><tr><td>72</td><td>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td></tr><tr><td>75</td><td>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td></tr></table>	과제번호	과제명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과제번호	과제명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div>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div> <table><tr><td>과제번호</td><td>과제명</td></tr><tr><td>93</td><td>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td></tr><tr><td>94</td><td>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td></tr><tr><td>95</td><td>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td></tr></table>	과제번호	과제명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95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과제번호	과제명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95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div>전략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div> <table><tr><td>과제번호</td><td>과제명</td></tr><tr><td>97</td><td>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td></tr></table>	과제번호	과제명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과제번호	과제명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div>전략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div> <table><tr><td>과제번호</td><td>과제명</td></tr><tr><td>47</td><td>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td></tr></table>	과제번호	과제명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번호	과제명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II. ESG 금융 및 공시 인프라 강화

이재명 정부는 ESG를 경제 구조 전환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규제는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시 기준의 법제화와 금융 지원 체계의 정비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자금조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ESG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유지해왔으며,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그 방향성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다.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기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의 질적 성장과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 금융의 강화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다.

ESG 금융 강화는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자금 조달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ESG 공시 인프라를 '코리아프리미엄 실현을 통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전략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제12대 중점 전략과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 2025-2026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확정 → **ESG데이터 관리 및 공시 역량 강화 필요**
- ESG 금융 강화 →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및 전략적 활용**

ESG 공시 기준 마련과 금융 강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은 ESG 경영 내재화와 공시 체계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III. 분야별 과제현황 - E (환경)

환경(E) 분야 과제들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서 산업과 정책의 방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1 재생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강조되었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더욱 뚜렷해졌다.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HVDC(고압직류송전) 선로 조기 완공, U자형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발전설비를 78GW로 확대하고, 해상풍력·태양광·조력·수열 등 에너지원 다양화와 함께 송배전망 확충,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DR(수요반응자원), 청정수소, 히트펌프, VPP(가상발전소)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제6차 신재생기본계획 수립: 2025
-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2025~2026
- RE100산단 특별법 제정: 2025~2026
- 서해안 및 U자형 전력망 구축: 2027~2030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재생에너지 확대 및 규제 완화 → **친환경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
-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법 → **RE100 참여 여부 검토 및 입지 전략 재편**
-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모델(PPA) 도입 →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전력 구매 모델 설계**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업의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다. 이는 에너지 비용, 공급 안정성,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영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선제적 대응 여부가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Ⅲ. 분야별 과제현황 - E (환경)

2 산업의 저탄소화 및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대비 40% 감축)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하기의 실질적 이행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 강화: 엄격한 배출허용 총량 설정과 함께 유상할당 비율 상향
- 기후대응기금 확충 및 재편: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확대
-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 2030년 목표보다 상향된 2035년 중간 감축목표를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장기 감축 경로(2031~2049년)'

또한, 정부는 산업 구조의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감축사업 재정 지원 확대, 업종별 탄소감축 R&D 강화, 전환금융 도입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2030 NDC 계획 수립: 2025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2025~2026
-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및 착수: 2025~2026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배출권거래제 강화 → 탄소배출비용 증가, 감축투자 필요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 기후 신산업 진출 기회 및 규제 대응

배출권 거래제 강화,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전환금융 도입은 기업의 생산투자재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전환계획이 자본조달과 신사업 확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III. 분야별 과제현황 - E (환경)

3 탈플라스틱 추진 및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감량부터 생산, 회수,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전주기탈플라스틱로드맵 수립**
- 플라스틱 감량·생산·회수·재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로드맵 수립
-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 수립**
- 3R(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 3단계(생산·소비·회수) 구조
-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및 회수체계 고도화**
-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및 제품 수리 용이성 평가제도화
- **배터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 CE100* 선언 확산, 순환경제 특화산단 지정,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CircularEconomy 100의 약자로,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2025~2028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등 제품 전주기 규제 강화 → **제품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회수·재활용 의무 확대 및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 자원순환 정책 강화 → **회수체계 고도화 및 공급망 협력 전략 마련 필요**

순환경제 정책은 산업 운영 방식과 공급망 구조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에코디자인 제도화 등은 EU의 규제와도 연계되어 있어 기업은 국내 정책뿐 아니라 국제 규제 흐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Ⅲ. 분야별 과제현황 - E (환경)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및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정부는 과학적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과 기후위험 통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과 도시의 기후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전동화 모델 확대 등 수송 부문 대응과 함께, 사업장·생활 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도 강화된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강력한 국가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구축 2025
-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2025~2030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대기오염 규제 강화 → 배출저감 설비 투자 및 친환경 연료 전환 필요
- 내연기관차 퇴출 및 전동화 확대 → 자동차·물류 업계 전환 전략 필요
- 수질 규제 강화 → 산업단지·제조업 폐수처리 기준 준수 강화
- 화학물질 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데이터 관리 및 규제 대응 필요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안전망 강화는 기업의 환경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업 운영 기준을 재정립하도록 유도한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와 대응 기술 고도화로 '환경 안전'은 비용이 아닌 공급망 신뢰성과 기업 평판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Ⅲ. 분야별 과제현황 - E (환경)

5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와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의 30%까지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을 병행한다. 외래생물 유입 차단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등 생물안보 체계도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AI·빅데이터 기반으로 개선되어,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생물다양성 관련 규제 및 보호지역 확대에 따른 사업 영향 분석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개발사업 대응 전략 수립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는 기업의 입지 전략과 개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TNFD*, ESRSE4* 등 글로벌 기준이 정립되면서, 기업은 자연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생물다양성 전략을 경영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기회를 평가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

* ESRSE4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Biodiversity & Ecosystems): ESRSE4는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항목을 다루는 기준

IV. 분야별 과제현황 - S (사회)

지난 8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정부의 첫 신호탄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조직 구조, 공급망 관리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1 노동시장 개혁과 불평등 완화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일터기본법' 제정으로 기존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까지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노동법원' 설립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권리구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별·지역별 교섭 활성화를 위한 초기업 단위 교섭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추진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가 추진되며, 동일임금 원칙과 차별 금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와 고용평등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범부처 TF 등을 통해 임금체불 합동 대응 방안 마련: 2025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2026~2030
- 일하는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시행: 2026~2030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2025
-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2025-2030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노동법·제도 개편에 따른 법적 책임 확대 → **인사노무대응 역량 재정비 필요**
- 임금체불 및 계약 관리 강화 → **하도급·플랫폼 계약 관리 체계 정비**
-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 등 → **조직 운영 방식 변화 가능성**
- 동일임금 원칙, 차별 금지, 성평등 공시제 도입 등 → **임금 및 인사관리 기준 변화에 따라 보상체계의 공정성 확보**

노동시장 개혁과 불평등 완화는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 대응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원칙과 인사 전략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IV. 분야별 과제 현황 - S (사회)

2 산업안전보건 강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산재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사고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1만 명당 0.29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과 50인 이상 제조업에는 원·하청 공동 안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작업중지권 도입 등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신산업·감정노동·야간노동자 보호도 확대된다. 산재보상은 조사기간 법정화, 급여 선지급,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과 보호 범위를 넓힌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2026~2030
-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2026~2030
-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2026~2030
- 위험성 평가 개선, 노동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 2026~2030
- 산재보험급여 선 지급,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2027~2030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 안전관리 정보 공개 및 책임 강화
- 원·하청 공동 안전위원회 의무화 → 협력업체 안전관리 체계 정비 필요
- 위험성평가 의무화 및 벌칙 신설,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도입 →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 강화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IV. 분야별 과제 현황 - S (사회)

3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정부는 AI 시대의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상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디지털 잊힐 권리'와 정보 삭제 요청권을 제도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AI 특례와 오남용 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AI 특례 도입): 2025
- AI 시대 대비 정보보호 종합계획 수립: 2025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AI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및 규제 강화 → **AI 기반 서비스-데이터 처리 시 법적 준수 사항 점검 및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
- 디지털 잊힐 권리 및 딥페이크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확대 → **데이터 삭제 요청 대응 프로세스 구축, 콘텐츠 검증 기술 및 보안 인증 체계 강화 전략 수립**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기술 활용 방식뿐 아니라 데이터 책임성과 신뢰 기반 경영을 요구한다.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맞춰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주요 경영 과제다.

IV. 분야별 과제 현황 - S (사회)

4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경제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규율을 강화하고, 입점업체의 권익과 협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거래 정보 제공 확대, 수수료 부담 완화, 단체협상권 보장 등으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술탈취 처벌 강화와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실질화하고, 피해구제기금과 전담지원체계를 통해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공급망 전반의 상생을 촉진한다.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도 강화된다. 지주회사 중복상장 유인 축소, 자사주 편법 규제, 과징금 합리화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플랫폼 거래 규율 강화 → 입점업체 권익 보호 및 협상력 제고
- 단체협상권·계약해지권 도입 → 중소상공인 경영 안정성 확보
- 내부거래 규제 강화 → 기업 지배구조 및 거래 투명성 확보
- 공정조달 제도 개선 →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리스크 관리 필요

협력업체와의 상생은 ESG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으며, 이번 정책은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것을 기업에 요구한다. 공정한 거래 관행, 기술 보호, 공급망 상생 전략의 내재화는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IV. 분야별 과제현황 - S (사회)

5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 확대와 피해구제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직접 청구,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피해구제기금 조성, 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통해 집단조정과 소송지원도 강화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평가위원회 신설과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및 주식처분명령 등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선, 마이데이터오픈뱅킹 기능 확대도 병행된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 기업대상 집단소송 리스크 증가
- 피해구제 기금 조성 →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 강화
-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및 일괄구제 제도 → 소비자 보호 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
-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 금융회사의 분쟁 대응 체계 정비 필요
- 금융사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 보안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 보호는 선택적 사항이 아닌 법적·제도적 책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은 강화되는 집단소송과 피해구제 제도에 대비해 소비자 대응 체계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V. 분야별 과제 현황 - G (거버넌스)

2025년 7월 3일과 8월 25일, 국회는 1·2차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이는 이사회 투명성, 소수주주 보호, 책임투자 확대, 자사주 운용 공정성,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거버넌스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상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과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이사회 운영과 주주권 보호에 구조적 변화를 유도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공정가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이사회 의견서 공시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여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 여부 공시를 내실화한다. 자사주 소각 제도화 및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확산한다.

** 합병·분할 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2025
- 합병·분할 등 관련 제도 개선: 2025-2026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2025-2026
-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2025-2026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상법 개정 및 지배구조 강화 → 이사회 운영 규정 점검 및 주주권 보호 체계 강화
- 자사주 소각 제도화 및 합병·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 자본정책, M&A 전략 재검토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 기관투자자 대응 및 공시 투명성 강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은 이사회 운영, 자본정책,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등 경영의 핵심 원칙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은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V. 분야별 과제 현황 - G (거버넌스)

2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조성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 박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선제적 행정조치로 대응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하고, 감시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불공정거래 탐지 역량을 높인다.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한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여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조치도 마련한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5-2030
- 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제재 가중: 2025-2030
- 부실기업 신속 퇴출: 2025-2030
- 미공개정보 이용 사전 예방: 2025-2030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항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

3 사익편취 금지

정부는 기업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사주 보유공시 기준을 확대하고, 자사주 처분소각 계획 공시 서식을 개선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을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이를 활용한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침이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항

- 자사주 보유공시 기준 확대 및 처분소각 계획 공시 강화 → 자사주 운용 전략 재점검 및 공시 투명성 강화
- 자사주를 활용한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지분 구조 및 내부거래 리스크 점검, 공정거래법 대응 체계 정비

VI. 기업 대응 방향

현 정부의 정책과 입법 흐름 속에서 ESG는 규제와 공시를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업에게는 필수 대응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하다.

1 규제 모니터링과 벤치마킹

연이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는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 이전부터 입법 속도를 높이며 주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 정부의 법안 제·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은 규제가 구체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규제는 EU 등 해외 정책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병행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은 국제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만큼, 해외 주요국의 정책 변화와 선도 기업의 대응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2 공시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 전략 재편

이재명 정부는 ESG를 경제 구조 전환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ESG 공시 기준의 항목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ESG 관련 정책—예를 들어 탄소중립, 노동시장 개혁, 지배구조 개선 등—은 대부분 ESG 공시 기준의 세부 항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 기준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공시 준비 과정은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코프 1·2·3 배출량, 노동권 보호, 이사회 운영 등 공시 항목을 준비하면서 기업은 운영 방식, 공급망,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국정과제를 통해 예고된 정책 변화들을 ESG 공시 기준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3 ESG 대응 체계의 내재화

ESG 관련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 운영, 공급망, 조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ESG를 조직 내부에 체계적으로 내재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외부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ESG를 기업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우선, ESG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다방면에 걸친 이슈를 포함하므로, 전략기획, 인사, 구매, 법무, 재무 등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 수집과 보고, 정책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비が可能해진다.

또한, ESG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사내 교육과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 ESG는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는 기업의 가치와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전사적 인식 제고와 실무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ESG 대응 체계의 내재화는 중장기 리스크 관리와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Sustainability Platform

스티븐 강 Partner

Sustainability Platform Leader

PwC Korea

steven.c.kang@pwc.com

권미엽 Partner

Sustainability Team

PwC Korea, Assurance

miyop.kwon@pwc.com

이보화 Partner

Sustainability Team

PwC Korea, Assurance

bo-hwa.lee@pwc.com

Markets

류길주 Partner

PwC Korea

gil-ju.ryu@pwc.com

장은영 Director

PwC Korea

celia.e.jang@pwc.com

윤이나 Manager

PwC Korea

ena.yun@pwc.com

유수민 Assistant Associate

PwC Korea

sumin.yoo@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9W-RP-108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